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 종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

Influence of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upon Their Social Capital

- The Case of Jongno-Gu -

이 숙 중** · 최 준 규*** · 유 희 정****

Lee, Sook-Jong · Choi, Jun-Kyu · Yu, Hi-Jeong

■ 목 차 ■

- I. 서론
- II.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서 거버넌스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인식이나 분석적 모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5가지 측면으로 인식되는 신뢰로서 정의하고,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적 특성과 행위를 제시하여 보다 분석적 모형으로서 사회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특성과 행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적 자산으로 다차원적 신뢰로 정의할 수

* 본 논문은 한국행정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논문 접수일: 2008. 11. 10, 심사 기간(1, 2차): 2008. 11. 17~12. 15, 게재 확정일: 2008. 12. 18

있다. 개인과 지역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은 이러한 사회자본에 바탕이 되고, 참여와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개인의 능동적 행위는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사회자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모형을 제시하고, 종로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사회자본 연구에 존재해왔던 연구 가설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은 신뢰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일한 개인적 특성을 지녔어도 지역적 특성이 어느정도 신뢰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정도가 더할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변수들을 정책이나 행정활동이 촉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거버넌스, 사회자본, 신뢰, 종로구

Despite the widely shared belief that social capital is important in forming governance system that can respond better to social problems, conceptualization and analytical models of social capital have been flawed. This study attempts to respond to this weakness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two sets of variables, I.e,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atterns of urban residents, upon the level of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trust. Multifaceted trust level is regarded here as a dependent variable of social capital to be explained by social characteristics--divided into individual demographical variables and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sub-regional income level and duration of residence--and behavioral patterns--reside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networking.

Survey data from Jongno-Gu residents reveal that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etc. influence the trust level. 2) more participation and active networking increase both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 trust. This study reveals that policy to enhance social capital is better to aim at nurturing suggested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 Keywords: Governance, Social Capital, Trust, Jongno-Gu

I. 서론

시장(market)과 정부(government)는 최근까지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작동해왔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은 사회문제에 포함되는 행위자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방식의 문제해결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 holders)이 공공의 문제에 관여하는 상호작용이자 그러한 상호작용을 제도화한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숙중, 2006:144).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논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의 발현이 항상 원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대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논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부상한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통해 이의 개선방안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자본이 거버넌스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믿음, 즉, 협력과 협동,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자본이 보다 풍부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연구경향은 사회자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정부성과, 경제성장, 지역정책, 개발정책, 보건정책 등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로 발전해왔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이나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사회자본이 사회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고 그 역학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실체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사회자본의 구조 내 역학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사회자본의 개념이나 사회자본 측정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자체의 현황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도 존재하지만, 그 연구 역시 사회자본의 개념적 속성을 분석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사회자본 구성요인들 간에 혹은 환경요인들 간에 작

동하는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탐색에 있어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본의 개념으로부터 측정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으로 종로구 지역의 사회자본 현황을 조사하였다. 종로구는 총 면적 23.92km²이며, 주간활동인구 200만 명 내외, 호적인구 140만 명 내외, 상주인구 20만 명으로 구성되며, 총 19개 동이 위치하고 있다. 종로구는 고궁과 박물관 등 전통적 서울을 대표하는 자치구이자 국가 주요 행정부처와 함께 언론기관, 금융기관이 몰려 있는 중추적인 행정-상업지이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자 정착 주민의 수도 상당수로 주거기능도 겸비한 도심지이다. 또한 지하철과 노선버스가 집중된 교통의 결절점으로 방사형 도로의 중심점이며, 문화시설, 고궁, 녹지 등의 우수한 문화 인프라와, 풍부한 녹지공간이 공존하는 도심지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도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해 온 종로구의 특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뚜렷한 지역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위치한 정치의 중심이라는 오랜 인식에 의하면 주민의 정부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 및 측정지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사회자본의 개념을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행동양식으로 구분하고 각각 특성에 따라 종로구의 사회자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이란 개념이 보편화된 것은 Coleman(1988)과 Bourdieu(1986)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Bourdieu는 ‘사회자본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는 것이다(Bourdieu,

1986). Bourdieu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물질적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고전적 자본의 개념으로부터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개념은 기술이나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적자본으로 이어지며, 이는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을 통한 문화자본으로 확대된다. 이때까지 자본의 분석수준은 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된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으로 집단에 의해 공유되며, 분석 수준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차원으로 확대된다. Coleman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신뢰와 연결시켜 정의한다. 그는 사회자본을 정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한다. 첫째로 사회자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가치를 지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Coleman은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달리 둘 혹은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자본의 기능은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소통의 통로, 그리고 도덕적 규범의 강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논의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정책적·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여러 실증적 연구들에서도 발견된다. Putnam은 이탈리아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다룬 그의 저서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태리 전역에 걸친 20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사회자본 수준과 지방자치 정부의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Putnam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사회의 생산적 잠재력을 증진시켜주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과 연관시켜 상호신뢰를 촉진하는 상호작용과 사회적 연결망으로 정의한다(Putnam, 1993). 그의 연구에 따르면, 네트워크와 상호부조와 같은 규범의 형태로 사회자본이 전승되는 지역에서는 자발적 협력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고 본다. 이후 사회자본은 정부성이나 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면서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Knack(2002)은 사회자본은 정부 성과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자본이 정부의 책임성을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즉, 일반화된 호혜주의 규범이 작동하고 상호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개인은 줄어들고, 정부는 정치 참여자들의 특성이나 수준에 따라 '지대추구'를 감소시키고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위기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양극화된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Tarits(2006)이나 Porta(2000) 등의 연구자들도 정부성과의 측면에서 사회자본과의 연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사회자본이 가진 관계적 자원으로서의 특징,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사회자본이 사회적으로 배태된 자원이라는 공통된 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경제적 성과나 정부성과와의 연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단지 정부 영역과 사회자본의 관계만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된 자원으로서 사회 여러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긍정적 효과는 규범의 강화(rule enforcement), 결속력(bounded solidarity), 강화되는 신뢰(enforceable trust)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일반적 혜택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친족 기반의 강한 연계나 친구나 지인을 통한 약한 연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망을 벗어난 다른 사람과 배경을 지닌 사람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G. L. H. Svendsen and G. T Svendsen, 2000:622-623). 실제로 Granovetter는 그의 연구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약한 연대(weak ties)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에 대한 약한 연대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의 흐름과 사회 체계 내에서의 약한 연대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약한 연대는 사회 집단 간 경계를 넘어서는 정보 교류를 통해 혁신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M. Granovetter, 1983). 이와 반대로,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서 발생한다. 사회자본의 부정적 결속(bonding)은 배척론자, 혹은 부정적 특징을 양산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양면적 효과에 대해 Kay는 사회자본을 실질적 개념으로 인지하는 것에 의해 그 부정적 측면의 일부에 대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공동체 발전에 보다 긍정적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A. Kay, 2006:170).

2. 신뢰로서의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 형태의 연구는 사회자본을 규범,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Putnam의 초기 연구에서 발견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 또한 사회자본을 규범,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거나 영향요인을 측정하고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박희봉, 2002; 박희봉·강제상·김상묵, 2003; 서진완·박희봉, 2003; 배병룡, 2005; 이창기·박종관, 2005; 김태룡, 2006; 이희창·박희봉·전지용, 2007)

일부에서는 신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Kay는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신뢰, 호혜성과 상호성, 행위의 공유된 규범, 공유된 의무와 소속감, 공식적·비공식적 사회 연결망, 효과적인 정보 창구 등 여섯 가지 요소가 높게 발현되어 만들어지는 공동체 내부의 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상당 수준의 상호

배려와 의무를 통해 정의되는 관계의 망(a web of relationship)'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자본의 정의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 간의 계층적 요소를 발견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trust)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의 유지를 위해서 신뢰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다(A. Kay, 2006:163-165). Fukuyama 역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핵심적 사회자본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 Fukuyama(1995)는 자발적 결사체인 로타리클럽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던 Toquville의 주장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여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신뢰와 경제적 번영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을 특정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특정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Fukuyama의 연구를 발전시켜 Fox(1994)는 산업 사회학에서의 신뢰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제도화된 신뢰(institutional trust), 신뢰 수준의 결정,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신뢰를 사람사이의 감정이 아닌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관계로서 파악하였고, 신뢰의 본질로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지적하였다(T. Shuller et als, 2000:17-18). 이외에도 Ahn과 Ostrom은 집단행동이론과 결부하여, 사회자본의 다양한 형태가 대체로 행위자 사이에서 신뢰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집단행동에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자본과 집단행동의 핵심적 연계로서 신뢰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신용도, 네트워크, 제도의 변수가 맥락적 가변성 속에 신뢰를 통하여 집단행동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Ahn and Ostrom, 2003).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사회자본의 개념을 신뢰로만 규정하여 상호신뢰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박찬웅, 1999; 박순미, 2000; 유재원, 2000; 김왕배·이경용, 2002; 김상미, 2005; 이재혁, 2006; 이근수·송건섭, 2007). 김상미(2005: 144)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가 사회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면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회의 신뢰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설명 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의 종합사회조사(KGSS & KSS)를 분석하여 양국 사이의 신뢰를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를 사회적 신뢰와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즉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이재혁, 2006). 정책과정에서 신뢰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신뢰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하고 이것이 정책결과 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박순미, 2000). 또 다른 연구에서 역시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을 측정하였는데, 이 때 신뢰를 대인신뢰, 단체신뢰, 정부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이근수·송건섭, 2007). 앞의 연구가 제도신뢰 혹은 공적신뢰로 파악한 것을 단체신뢰와 정부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측정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여의 형태에

따라 통상적·비통상적 참여를 구분하고, 투표, 정치관심 및 지식, 정치 효능 등을 측정함과 더불어 신뢰의 측면에서는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로 구분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유재원, 2000).

3.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성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구조적·인지적 차원, 수평적·수직적 차원, 분석 단위의 수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사회자본은 그 개념적 구성을 달리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자본 구성에 관한 분석적 논의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영향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인지적(cognitive) 차원과 구조적(structural) 차원의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이다. Grootaert와 Bastelater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자본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는데,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적 구조로, 네트워크, 결사체 등을 나타낸다면, 인지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은 보다 주관적이며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태도와 행위 규범, 공유된 가치, 호혜성과 신뢰 등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B. Grootaert and T. V. Bastelater, 2002:19-21). Harpham 등도 사회자본을 구조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고, 구조적 요소는 결사체의 연결 혹은 활동의 범위와 강도이며, 인지적 요소는 지원(support), 호혜성(reciprocity), 공유(sharing), 신뢰(trust)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Harpham에 따르면 구조적 요소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what people ‘do’)'으로 인지적 요소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what people ‘feel’)'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T. Harpham et als, 2002:106). Grootaert와 Bastelater는 “사회자본의 구조적(structural) 요소와 인지적(cognitive) 요소가 구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는 사람들 상호 간 이익을 추구하는 집합행동을 만드는 반면, 구조적 요소들은 인지적 요소들의 이런 행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구조적, 인지적 양상들은 집합적 행동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제시된다. 이외에도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 그리고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영역 역시 분석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B. Grootaert and T. V. Bastelater, 2002:19-21).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의 집합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집합적 특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부에서는 사회자본을 개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Glaeser 등은 개인 변수를 생명주기 효과, 개인의 이동성, 사회적 숙련도, 주택 소유 여부, 물리적 거

리와 여행비용, 개인적 특성 등으로 규정하였다. Glaeser 등은 개인에 기초한 사회자본 연구가 개인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사회자본 축적에 대한 내재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개인적 접근은 복잡하고 자세한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합적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회자본의 축소된 대표들을 측정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E. L. Glaeser et al, 2002: 444). Porte 역시 두 차원의 분석단위에 따라 사회자본의 연구를 구분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자본의 초기 이론을 발전시킨 Bourdieu(1980)이나 미국의 사회학자 Coleman(1993a, 1993b)과 같이 분석 단위를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자본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그 출발은 앞서 연구된 Coleman(198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Coleman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결속은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에게서 산출되기 때문에 중요했고, 이는 공동체의 결속에 관심이 발원했다. 또한 Putnam(1993b, 1995)은 공동체, 국가, 하위구조적 결과에 의해 소유된 사회자본의 축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Putnam은 개인적 이익과 집합적 이익이 양립가능한 것으로서 사회자본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Alejandro Portes, 2000:1-3).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 차원에서 개별 행위자의 신뢰와 집합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을 구분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Knack은 사회자본을 자원봉사(volunteering), 조사 응답률(census response),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비공식적 사회활동(index of informal socializing), 클럽 활동에의 참여(attendance at club meeting), “좋은 정부” 집단에서의 멤버십(membership in “good government” groups)으로 측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 조사 응답률, 사회적 신뢰는 일반화된 호혜성 혹은 시민협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였으며, 비공식적 사회활동, 클럽 활동에의 참여, “좋은 정부” 집단에서의 멤버십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었다(S. Knack, 2002:776-777). 여기에서 일반화된 호혜성이나 시민협동의 측면은 보다 개인적 특성에 가깝다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수는 집단적 차원의 변수에 가까운 의미를 보이고 있다. 유사한 논의로 Paldam과 Svendsen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잡아내는 측정항목으로 자발적 조직에서의 멤버십(membership), 일반적 신뢰(general trust), 공식적 조직에서의 신뢰(trust in formal institutions)를 들고 있다. 조직에서의 멤버십이 면대면(face-to-face)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일반적 신뢰와 공식적 조직에 관한 신뢰는 사회 속에 내재된 집합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 L. H. Svendsen and G. T Svendsen, 2000:624). Lochner 등(1999) 역시 사회자본이 사회 구조안의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 구조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사회 네트워크나 지원(support)의 개념과는 구분된다(T. Harpham et als, 2002:107). 이상에서 보면 표면적

으로 사회자본은 개인적·집합적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먼저 언급한 인지적·구조적 특성 과도 연결될 수 있다.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자본의 개인적 특성은 인지적 특성과, 그리고 사회에 내재해 있는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집합적 특성은 구조적 특성과 유사한 논리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사회자본은 그 지평(scope) 혹은 관찰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미시적(micro) 차원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는 연합된 규범과 가치를 측정하고, 중시적(meso) 차원에서는 집단의 수직, 수평적 관계, 그리고 거시적(macro) 차원에서는 경제와 사회 활동을 수반하는 제도적, 정치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B. Grootaert and T. V. Bastelater, 2002:3). 또한 Pitchler와 Wallace는 사회자본을 형식적 사회자본과 비형식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고, 두 유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형식적 사회자본은 공식적으로 구성된 조직과 활동, 그리고 일반화된 사회 신뢰의 개념을 포함한다면 비공식적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는 사회 네트워크의 측면을 강조한다(F. Pitchler and C. Wallace, 2007:423-424).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구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 특성과 인지적 요소,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집합적 특성과 구조적 요소가 유사한 논리적 맥락 아래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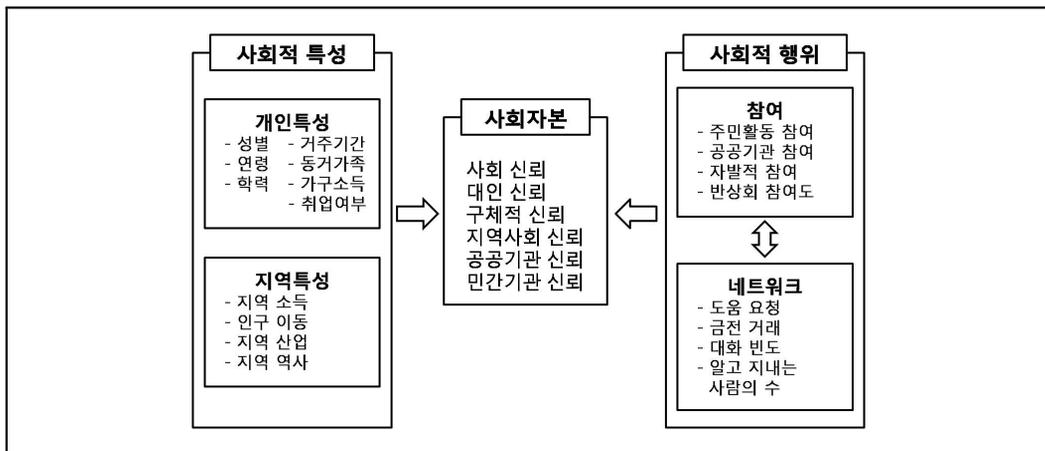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사회자본 자체가 형성되는 영향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속성 사이에는 개념 상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측정이나 개념적 인식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행위자들 사이에 축적된 신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포괄적 사회자본 연구에서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참여나 네트워크 요소를 분리시켜 보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사회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참여나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행위 변수로서 참여와 네트워크를 분리시킬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 요인에 있어서 개인 변수를 강조한 부분은 개인의 인지적 사회자본에 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사회의 집합적 요소를 강조한 지역 변수는 사회에 축적된 사회자본의 구조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자본에 대한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가진다.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측정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행위 변수로 구분하여 그 정도에 따라 사회자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축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특성은 개인과 지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¹⁾으로 제시되며, 행위자의 능동적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참여와 그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행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주요 분석 내용은 우선, 지역의 사회자본을 조사하여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사회적 특성을 개인변수와 지역변수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위를 참여와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에 따른 사회자본



1) Kay는 “사회자본은 지방정부와 다른 권위있는 지역의 영향의 전반적 특징 및 사회자본이 작동하는 맥락(context)과 연결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으로 ‘역사(history)’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A. Kay, 2006: 166).

위의 분석 모형은 중심이 되는 사회자본을 사회 내부에 축적된 사회적 신뢰로서 규정하고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행위 변수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개인특성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지역특성 변수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특성은 여섯 가지 분류로 명시된 사회자본에 각기 다른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과 사회에 내재된 사회적 특성 이외에 행위자가 행동하는 사회적 행위에 따라서도 사회자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과 개별 행위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참여는 특정 활동이나 형식적 집단에서 행동하는 양식을 의미한다면, 네트워크는 행동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확장 범위를 비형식적·비공식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변수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특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사회 내부에 축적된 신뢰의 양상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사회자본은 신뢰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사회자본 연구에서 그 개념이 규범, 참여, 네트워크, 신뢰를 모두 포함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로서의 사회자본을 정의하는 것은 참여나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행위에 의한 요소가 그 자체로서 사회자본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사회자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일반에 대한 사회신뢰, 가깝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신뢰,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구체적 신뢰로 구분되며,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신뢰,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공공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제반 신뢰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에 일정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행위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특성 변수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낮을수록(통상 서구연구는 높을수록), 지역특성 변수에 있어서는 지역소득이 높을수록, 인구 이동이 낮을수록, 지역의 산업이 번성하고 역사가 길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하다는 발견들을 제공해 왔다. 또한 사회적 행위의 측면에서는, 주민활동이나 공공기관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사회자본이 풍부하다는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2. 조사 설계 및 변수의 구성

1) 조사 설계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종로구의 사회자본을 파악하고 차원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종로구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면대면 설문 방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을 위한 표본의 추출은 종로구 19개 동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²⁾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총 340부를 배부하여 이 가운데 321부를 회수하여 94.4%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62%로 높았으며, 연령은 40대 이하가 전체의 8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60대도 전체의 17%로 전체 응답자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64%로 절반 이상을 보이고 있고,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58%, 동거가족의 수는 3명이상이 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구소득과 취업현황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지리적으로 종로구는 총 19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북서, 북동, 중앙, 남서, 남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서지역에 부암동과 청운동, 북동지역에 평창동, 명륜3동, 혜화동, 중앙 지역으로 종로1·2·3·4가동, 가회동, 남동 지역으로 교남동, 무악동, 남서 지역으로 창신동과 송인동 지역, 총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19개 행정동에 걸쳐서 청운동 7, 효자동 18, 사직동 6, 삼청동 3, 부암동 9, 평창동 5, 무악동 46, 교남동 23, 가회동 6, 종로1·2·3·4가동 31, 종로5·6가동 0, 이화동 3, 혜화동(2개동) 6, 명륜동 36, 창신동(3개동) 47, 송인동(2개동) 21의 189부와 종로구 외의 인근 지역에서 조사된 설문으로 성북구의 삼선동 2, 성북동 2, 보문동 1, 돈암동 1, 중구에서 송월동 5, 동대문구 신설동 2, 기타 지역 3 등 16부, 마지막으로 미응답 지역으로는 38부로 파악되었다. 종로구 이외의 지역이 포함되는 이유는 종로구에서 활동하지만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표 1 >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3	35	동거가족	1-2명	52	16
	여성	198	62		3명 이상	242	75
	결측값	10	3		결측값	27	8
연령	10-20대	125	3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2	38
	30-40대	132	41		300만원 이상	124	38
	50-60대	54	17		결측값	75	23
	결측값	10	3		취업	134	42
학력	고졸이하	100	31	취업여부	미취업	158	49
	대졸이상	204	64		결측값	29	9
	결측값	17	5		총 합계		321
거주기간	10년미만	186	58				
	10년이상	110	34				
	결측값	25	8				

2) 변수의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신뢰(trust)'로 규정하고 접근한다. 신뢰에 대한 측정지표는 2006년 실시된 KDI의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신뢰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자 상호간에 개인적인 신뢰는 전체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사회신뢰'로 대표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신뢰는 세부적으로 친족, 친구 등 행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신뢰를 묻고 있는 '대인신뢰'와 사회적 접촉은 있지만 구체적 친분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 타인에 신뢰를 묻는 '구체적 신뢰'로 구분된다. 반면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신뢰는 소속되어 있는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는 '지역사회 신뢰'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로 구분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에 대한 구분은 선행연구들로부터 추론 가능할 뿐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로도 그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³⁾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3)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6개의 요인을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을 실시하였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 신뢰를 묻고 있는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역시 사회신뢰가 .490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Cronbach's Alpha값이 대인신뢰 .675, 구체적 신뢰 .866, 지역사회 신뢰 .723, 공공기관 신뢰 .899, 민간기관 신뢰 .792로 전체적으로 0.6이상의 값을 보여주면서 문항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사회신뢰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가 .490으로 나온 것은 설문 문항의 수가 적고, 작성에 있어서 설문 문항이 부정적으로 작성되어, 설문 응답자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⁴⁾ 사회신뢰에 대한 문항은 이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세부적 분석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신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사회 신뢰	대인 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 신뢰	공공기관신뢰	민간기관신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보다 공정하게 대해주려고 함	0.822	-0.075	-0.050	-0.012	0.027	0.091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도우려함	0.774	0.156	0.091	0.179	0.055	-0.082
가족	0.022	0.845	-0.091	-0.068	0.143	0.088
직장동료들(학생의 경우, 동료학생들)	0.034	0.586	0.509	0.208	0.057	-0.032
이웃사람들	0.085	0.526	0.460	0.264	0.187	-0.056
종교가 다른 다른 사람들	0.000	0.026	0.820	0.046	0.052	0.118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	0.015	0.096	0.774	0.138	0.190	0.123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0.114	-0.049	0.701	0.006	0.236	0.151
세대차가 나는 사람들	-0.067	0.009	0.699	0.156	0.192	0.177
처음 만나는 사람들	-0.049	0.025	0.682	0.229	0.190	-0.065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나 단체 사람들	0.062	0.409	0.590	0.261	0.185	0.035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0.174	-0.102	0.126	0.751	0.077	0.080
거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믿음	0.159	0.112	0.269	0.735	0.121	0.129
거주지역 주민들의 준법 정신	0.181	0.155	0.067	0.655	0.191	0.140
거주지역 주민들의 준법 정신	0.181	0.155	0.067	0.655	0.191	0.140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성	0.086	0.032	0.118	0.650	0.237	-0.045
서울시청	0.034	0.064	0.158	0.077	0.915	0.107

4)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보다 공정하게 대해주려고 함'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도우려함'을 질문함에 있어서 본 연구 설문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함'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함'으로 질문하여 응답자의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종로구청	0.038	0.056	0.149	0.260	0.855	0.072
중앙정부	0.002	0.039	0.189	0.083	0.817	0.073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0.032	0.081	0.177	0.287	0.722	0.136
경찰	0.060	0.176	0.216	0.097	0.702	0.274
시민단체	0.046	-0.005	0.101	0.004	0.079	0.907
노동단체	0.064	0.013	0.097	0.027	0.155	0.889
대학	-0.129	0.066	0.124	0.303	0.259	0.558

다음으로 이러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행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특성의 경우, 개인특성과 지역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특성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동거가족의 수, 가구소득, 취업여부를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 특성은 사회적 행위자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 아닌 사회자본이 작동하는 지역에 내재된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에 내재된 특성은 사회·경제·문화·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다면적 지역 특성을 실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나마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서 지역소득, 인구이동, 지역산업, 지역의 역사적 특성 등을 선택하였다. 지역소득과 지역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이동과 역사적 맥락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소득은 각 동별 전체 소득을 대신하여 종로구의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절대 빈곤층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구분하고자 하였다.⁵⁾ 인구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제외한 순이동으로 구분하였으며⁶⁾, 지역 산업의 경우 종로구에서 동별로 걷히는 지방세⁷⁾를 기준으로

5) 분석을 위하여 동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를 구분한 결과 2% 미만인 지역은 청운, 평창, 명륜3가, 사직, 삼청, 부암, 교남, 혜화동으로 총 8개동, 2% 이상인 지역은 무악, 이화, 효자, 송인, 가회, 창신, 종로1·4가동으로 총 7개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2008 종로구 구정현황).

6) 인구이동은 2007년에 발간된 종로구청 통계연보에 따른 2006년 순이동(=전입-전출) 현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2.5% 미만으로 유출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사직, 삼청, 무악, 창신, 송인동 등 총 5개동이, 그리고 -2.5% 이상으로 유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청운, 효자, 부암, 평창, 교남, 가회, 종로 1·4가, 이화, 혜화, 명륜동 등 총 10개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2007년 종로구청 통계연보).

7)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走行稅)·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屠畜稅) 등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사업소세(事業所稅)·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이다(동법 제5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을 포함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역의 산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하고 지역 산업특성

분류하여 분석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역사적 맥락은 1975년에 시행된 종로구 관할구역 조정을 기준으로 기존의 종로 지역과 조정 이후 새롭게 편입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⁹⁾ 이러한 개인특성 및 지역특성을 나타내주는 분류들은 평면적인 사회자본 현황에 있어서 직·간접적 차이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특성과 지역특성 이외에 사회자본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행위 변수를 언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참여, 네트워크, 신뢰를 모두 사회자본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신뢰를 정의하고 참여와 네트워크가 가지는 행위적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는 분리수거작업이나 부녀회 등 지역 생활을 위한 개인의 주민활동 참여와 구청 혹은 동사무소와의 접촉을 묻고 있는 공공기관 참여, 그리고 봉사활동과 같이 자발적·사회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자발적 참여, 그리고 공동체 현안에 대한 직접적 참여 정도로서 반사회 참여의 빈도를 묻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경우, 호혜성의 바탕이 되는 도움요청, 금전거래, 대화빈도,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 등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항목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참여와 네트워크의 측정 지표

개념요소	측정치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공동 활동(분리수거, 반사회, 부녀회 등) 여부 • 구청, 동사무소 주도의 행사 참여 •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 반사회 참석의 정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정도 •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 이웃과의 대화 빈도 •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알고지내는 사람의 수

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 8) 지방세징수 역시 2007년 발간된 종로구청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2006년의 동별 지방세 납세 현황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00억 미만은 삼청, 무악, 명륜, 청운, 효자, 부암, 교남동으로 총 7개동이, 100억 이상 150억 미만은 가회, 혜화, 송인동 총 3개동 그리고 150억 이상은 사직, 평창, 이화, 창신, 종로동 등 총 5개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2007년 종로구청 통계연보).
- 9) 종로구는 1975년 10월 대통령령 제7816호 종로구 관할구역 조정에 의해 부암, 홍지, 신영, 구기, 평창, 교남, 교북, 송월, 평, 행촌, 홍파, 무악, 창신, 송인, 현저, 충정로1가동이 새롭게 종로구로 편입되었다. 종로구 연혁의 검토 및 관계자 면접에 따르면 이는 종로구 행정 구역 상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특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기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종로구 사회자본 현황

종로구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질문은 10점 척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에 10점,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0점으로 채택하여 그 결과를 측정하였다. 종로구 전반적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는 2006년 실시된 KDI의 일반국민의 사회자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로구에서 측정된 사회자본 현황과 이전에 조사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종로구 사회자본과 일반국민의 사회자본 비교¹⁰⁾

구분	측정항목	평균	
사회 신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기보다 공정하게 대해주려고 함	5.91(6.00)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도우려함	4.47(5.00)	
대인 신뢰	가족	8.96	
	이웃사람들	6.46 (6.00)	6.55 (6.27)
	직장 동료들(학생의 경우, 동료 학생들)	6.63 (6.53)	
구체적 신뢰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나 단체 사람들	6.32 (6.53)	5.41 (5.27)
	처음 만나는 사람들	4.50 (4.04)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	5.14	5.27
	종교가 다른 사람들	5.25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	4.93	
	세대가 다른 사람들	5.49	

10) ()의 값은 2006년 8월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자본 실태를 조사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조사”결과이다. 조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였으며, 개별가구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되었다. 표본설계에 있어 모집단은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표본크기는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최대 표본허용오차는 $\pm 2.53\%$ 이며, 표본의 추출은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을 사용하였다. 이는 15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수 배당을 의미하며, 표본지점(final field location)은 한 표본지점에서 시(市) 지역의 경우 5-7표본, 읍·면지역의 경우 10-12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KDI, 2006: 212-218).

지역 사회 신뢰	거주 지역에 대한 안전성	7.21		6.91	5.68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	6.91			
	거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믿음	6.79			
	거주 지역 주민들의 준법 정신	6.76			
공공 기관 신뢰	(중앙)정부	4.47(3.35)		5.12 (3.90)	
	서울시청	4.91	5.44 (3.89)		
	종로구청	5.38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6.03			
	경찰	5.19(4.48)			
민간 기관 신뢰	노동단체	4.34(4.68)		5.02 (5.18)	
	시민단체	4.90(5.41)			
	대학	5.83(5.44)			

종로구 사회자본의 평균값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신뢰 평균(5.94) 정도가 공동체적 차원의 지역사회 및 기관 신뢰 평균(5.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인신뢰(7.3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가족에 대한 신뢰(8.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신뢰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6.91)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 기관 신뢰(5.02), 특히 노동단체에 대한 신뢰(4.34) 항목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KDI(2006)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사회자본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신뢰 평균이 지역적 차원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KDI의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개별적인 사회자본 정도에 있어서도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공공기관 신뢰는 일반 국민의 신뢰보다 높게 측정된 반면, 사회신뢰와 민간기관 신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차가 가장 크게 측정된 요인은 1.22의 차이를 보여주는 공공기관 신뢰로, 그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 항목 평균값의 차가 1.5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신뢰와 민간기관 신뢰 항목 중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신뢰정도는 일반국민의 신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주요 행정기관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특성이나, 행정 중심지로서의 오랜 역할을 해왔던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시민사회 혹은 노동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는 경향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자본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신뢰 차원(5.94)에서는 구체적

신뢰(5.27)보다 대인신뢰(7.35)가 월등히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신뢰에서는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신뢰(6.32)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 평균(5.27)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4.50)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4.93)가 특히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신뢰(5.68)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5.02)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반면,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신뢰(6.91)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주민들에 대한 믿음보다 거주지역의 안전성(7.21)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5.44)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4.47)가 전국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가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신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신뢰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평균값이 중앙정부(4.47)에서 서울시청(4.91), 종로구청(5.38), 동사무소(6.03)로 이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은 시민이 상대적으로 기관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좁혀질수록 신뢰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신뢰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학에 대한 신뢰(5.83)는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동거가족, 가구소득, 취업여부에 따라 집단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연령과 학력 부분이다. 성별의 경우, 전반적 신뢰 평균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인신뢰와 구체적 신뢰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동체나 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성의 사회적 신뢰 혹은 안정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는 2·30대의 신뢰 평균보다 40대 이상의 신뢰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뢰요인 전체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학력에 있어서 역시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신뢰 평균이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부분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학력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신뢰 평균을 나타낸다. 이는 고학력 집단일수록 사회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서 거주기간, 동거가족, 가구소득,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고, 취업을 한 집단일수록 신뢰 평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값의 경향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 신뢰		공공기관 신뢰		민간기관 신뢰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성별	남자	7.54 (1.573)	-2.065 (.040**)	5.48 (1.605)	-3.246 (.001***)	6.96 (1.299)	-1.280 (.201)	5.17 (1.820)	.035 (.972)	5.09 (1.939)	-.433 (.665)
	여자	7.20 (1.342)		4.92 (1.174)		6.76 (1.311)		5.18 (1.866)		4.99 (1.970)	
연령	20-30	7.17 (1.274)	3.633 (.028**)	4.76 (1.372)	13.933 (.000***)	6.59 (1.325)	6.702 (.001***)	4.93 (1.728)	5.193 (.006***)	4.78 (1.815)	2.574 (.078*)
	40-50	7.67 (1.480)		5.69 (1.490)		7.01 (1.221)		5.15 (1.805)		5.19 (2.015)	
	60-	7.37 (1.871)		5.47 (1.433)		7.30 (1.294)		5.87 (1.941)		5.45 (1.954)	
거주기간	10년 미만	7.61 (1.302)	2.078 (.039**)	5.20 (1.296)	-.008 (.993)	7.05 (1.174)	.360 (.719)	5.14 (1.476)	.460 (.646)	4.82 (1.918)	-.726 (.469)
	10년 이상	7.18 (1.621)		5.21 (1.562)		6.99 (1.271)		5.02 (2.147)		5.03 (2.051)	
동거가족	1-2명	7.35 (1.435)	-.111 (.912)	5.19 (1.336)	-.271 (.786)	7.32 (.984)	3.612 (.000***)	5.31 (1.750)	.698 (.486)	5.44 (1.930)	1.421 (.156)
	3명 이상	7.38 (1.489)		5.25 (1.527)		6.72 (1.332)		5.12 (1.881)		5.01 (1.998)	
가구소득	300 미만	7.19 (1.519)	-2.313 (.022**)	5.16 (1.476)	-1.242 (.215)	6.80 (1.172)	-.938 (.349)	5.25 (1.905)	1.046 (.296)	5.43 (2.020)	3.063 (.002***)
	300 이상	7.62 (1.414)		5.41 (1.553)		6.95 (1.272)		5.01 (1.666)		4.64 (1.977)	
취업여부	취업	7.29 (1.357)	-.861 (.390)	5.10 (1.367)	-1.158 (.248)	6.76 (1.204)	-1.203 (.230)	5.21 (1.892)	.298 (.766)	5.26 (1.868)	1.968 (.050*)
	미취업	7.44 (1.506)		5.30 (1.532)		6.95 (1.383)		5.14 (1.790)		4.79 (2.048)	

주: * p<0.1, **p<0.05, ***p<0.01

2)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은 지역소득, 인구이동, 지역산업, 지역역사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소득은 종로구의 동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로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인구이동은 순이동(전입-전출)으로, 지역산업은 지방세 징수 규모, 그리고 지역 역사의 경우, 지역 행정 구역 조정 시기를 전후하여, 기존지역과 신편입 지역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류로 개인적 특성은 부분적으로나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지역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수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사 대상이 종로구에 한정됨에 따라 동별 현황이 지역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 동별로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우며, 또한 활동 및 거주 인구의 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보여주기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별로 보여주는 평균값에서는 향후 연구를 위한 부분적 경향성(pattern)을 발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수로 대표된 지역소득의 경우, 2%미만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역소득이 높은 지역에서의 신뢰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순이동에 있어서는 -2.5%미만으로 인구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도 지방세 징수 규모가 150억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사적신뢰를 제외한 모든 신뢰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며, 기존 지역이 새로이 편입된 지역보다 높은 신뢰 평균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사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사회자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동이 적을수록, 지역성이 강할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역 특성 관련된 가설들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 신뢰		공공기관 신뢰		민간기관 신뢰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F값 (유의확률)
기초 생활 수급자	2%미만	7.62 (1.378)	2.148 (.033**)	5.38 (1.546)	.913 (.362)	6.99 (1.414)	.994 (.321)	5.24 (2.214)	.245 (.087*)	5.04 (2.105)	-.102 (.919)
	2%이상	7.21 (1.503)		5.21 (1.430)		6.83 (1.215)		5.18 (1.726)		5.07 (1.968)	
인구 순이동	-2.5% 미만	7.43 (1.505)	1.086 (.278)	5.37 (1.470)	1.237 (.217)	6.96 (1.370)	1.102 (.272)	5.42 (2.036)	2.102 (.037**)	5.09 (2.084)	.249 (.803)
	-2.5% 이상	7.24 (1.429)		5.14 (1.466)		6.78 (1.205)		4.93 (1.687)		5.03 (1.924)	
지방세 징수	100억미 만	7.43 (1.434)	.543 (.581)	5.23 (1.537)	.346 (.708)	6.96 (1.303)	3.740 (.025**)	5.15 (1.923)	.344 (.709)	4.93 (2.058)	1.093 (.337)
	100억- 150억	7.19 (1.490)		5.16 (1.211)		6.34 (1.489)		5.05 (1.740)		4.94 (2.192)	
	150억이 상	7.28 (1.530)		5.37 (1.460)		6.97 (1.167)		5.33 (1.937)		5.32 (1.860)	
역사적 맥락	기존 지역	7.40 (1.532)	.566 (.572)	5.28 (1.344)	.121 (.903)	7.00 (1.298)	1.289 (.199)	5.42 (1.939)	1.641 (.102)	5.18 (1.992)	.808 (.420)
	신편입 지역	7.30 (1.428)		5.26 (1.564)		6.79 (1.296)		5.30 (1.859)		4.97 (2.029)	

주: * p<0.1, **p<0.05, ***p<0.01

3. 사회적 행위에 따른 사회자본

1) 참여와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참여와 네트워크 사이의 영향관계와 참여와 네트워크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참여와 네트워크를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의 경우는, 주민활동, 자발적 활동, 공공기관과의 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여부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마지막 반사회 참여도¹¹⁾는 단순한 참석정도가 아닌 반사회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를 질문하여 반사회 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는 도움요청¹²⁾, 금전거래¹³⁾, 이웃과의 대화빈도¹⁴⁾,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¹⁵⁾로 측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참여와 네트워크는 일반적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위에 따른 결과물로서 신뢰를 파악하고 그를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행위변수로서 참여와 네트워크를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와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또한 존재한다. 개인의 참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가 다시금 개인의 참여를 돕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참여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네트워크는 신뢰 형성에 있어서 개인과 구조의 중간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에 따른 사회자본을 살펴봄에 있어서 참여와 네트워크에 따라 사회자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앞서 참여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도에 따라 구분된 참여와 네트워크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¹⁶⁾ 참여 부분에 있어서, 주민활동 참여, 공공기관 참여, 자발적 참여, 반사회 참여도와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도움요청, 금전거래, 대화빈도,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를 각

11) 반사회 참석정도는 '매번 참석'과 '가끔 참석'으로 응답한 인원을 묶어서 '많음'으로 '거의 없음'을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12) 도움요청은 '1-2명'을 '적음', '20명 이내'를 '보통', '20명 이상'을 '많음'으로 구분하였다.

13) 금전거래는 '5만원 미만'을 '적음', '100만원 이내'를 '보통'으로, '100만원 이상'을 '많음'으로 구분하였다.

14) 대화빈도는 '한 달에 몇 번' 혹은 '거의 못함'이라는 응답은 '적음'으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많음'으로 구분하였다.

15) 알고지내는 사람의 수는 '1-2명'을 '적음', '20명 이내'는 '보통', '20명 이상'은 '많음'으로 구분하였다.

16) 교차분석(Contingency Table Analysis)이란 두 변수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명목변수나 서열변수의 분석에 있어 관측치 수가 적을 때 사용한다.

각 연결시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참여와 금전거래, 반사회 참여도와 금전거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교차분석 결과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는 참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앞서 사회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보다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 7>을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참여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은 신뢰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 항목에 있어서도 신뢰 평균값만 살펴보면, 참여 집단에서 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신뢰 형성이 두드러지며, 사회자본의 축적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7) 참여와 네트워크의 각 항목을 연결시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유의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활동 참여		공공기관 참여		자발적 참여		반사회 참여도	
	pearson 카이제곱	유의 확률	pearson 카이제곱	유의 확률	pearson 카이제곱	유의 확률	pearson 카이제곱	유의 확률
도움요청	8.886	.012**	8.382	.015**	15.222	.000***	11.374	.023**
금전거래	7.928	.019**	5.395	.067*	1.586	.452	2.790	.594
대화빈도	55.855	.000***	36.911	.000***	32.585	.000***	18.775	.000***
알고지내는 사람의 수	49.434	.000***	48.545	.000***	47.192	.000***	11.029	.026**

주: * p<0.1, **p<0.05, ***p<0.01

〈표 7〉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 신뢰		공공기관 신뢰		민간기관 신뢰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주민 활동 참여	참여	7.77 (1.509)	3.721 (.000***)	5.56 (1.496)	2.851 (.005***)	7.20 (1.312)	3.807 (.000***)	5.47 (1.854)	2.580 (.010**)	5.31 (1.911)	1.862 (.064*)
	미참여	7.15 (1.428)		5.08 (1.441)		6.64 (1.245)		4.94 (1.756)		4.90 (1.937)	
공공 기관 참여	참여	7.68 (1.477)	2.067 (.040**)	5.62 (1.706)	2.718 (.007***)	7.13 (1.273)	2.362 (.019**)	5.76 (1.796)	3.841 (.000***)	5.41 (1.950)	2.078 (.039**)
	미참여	7.31 (1.472)		5.13 (1.353)		6.75 (1.291)		4.92 (1.769)		4.92 (1.910)	
자발적 참여	참여	7.69 (1.503)	2.416 (.016**)	5.55 (1.563)	2.428 (.016**)	7.08 (1.237)	1.920 (.056*)	5.49 (1.859)	2.385 (.018**)	5.20 (1.915)	.843 (.400)
	미참여	7.27 (1.469)		5.12 (1.404)		6.78 (1.300)		4.98 (1.778)		5.00 (1.955)	
반사회 참여도	많음	7.83 (1.436)	.929 (.356)	6.18 (1.854)	1.086 (.281)	7.58 (.965)	1.045 (.300)	6.56 (1.424)	1.962 (.054*)	5.63 (1.641)	.470 (.640)
	적음	7.42 (1.591)		5.67 (1.551)		7.25 (1.141)		5.58 (1.827)		5.38 (1.859)	

주: * p<0.1, **p<0.05, ***p<0.01

3) 네트워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자본 차이 분석 결과는 <표 8>로 정리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자본의 차이는 참여에 의한 차이 분석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로 구분한 ‘도움요청’ 항목에 있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신뢰를 제외하고, 모든 신뢰요인에서 도움요청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더 높은 신뢰값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신뢰에서 역시 적은 집단보다는 보통 혹은 많은 집단에서 보다 높은 신뢰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는가를 질문한 대화빈도의 측면에서 역시 모든 측면에서 대화가 많은 집단에서 높은 신뢰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여부와 그 금액을 묻는 ‘금전거래’ 항목과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에 대한 항목에 따른 신뢰의 차이분석은 일관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신뢰 평균값만을 본다면, 금전거래 규모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전거래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와 같은 항목은 공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신뢰에 있어서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신뢰를 묻고 있는 대인신뢰 부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변수가 단순한 참여와는 구분되는 '호혜성(reciproc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개인적 친분이나 연계구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지역 연결망이 강할수록 지역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는 통상적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8> 네트워크에 따른 사회자본 차이 분석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 신뢰		공공기관 신뢰		민간기관 신뢰	
		평균 (표준 편차)	t/F값 (유의 확률)								
도움 요청	적음	7.20 (1.549)	3.756 (.025**)	4.99 (1.232)	8.951 (.000***)	6.77 (1.291)	3.221 (.041**)	4.77 (1.586)	3.744 (.025**)	4.49 (1.687)	7.765 (.001***)
	보통	7.67 (1.372)		5.52 (1.513)		7.04 (1.220)		5.37 (1.744)		5.38 (1.867)	
	많음	7.92 (1.729)		6.61 (1.705)		7.61 (1.422)		5.06 (2.122)		5.67 (1.953)	
금전 거래	적음	7.13 (1.520)	3.643 (.028**)	5.38 (1.779)	1.798 (.168)	6.88 (1.502)	.129 (.879)	5.36 (2.286)	.988 (.374)	4.87 (2.395)	2.523 (.083*)
	보통	7.35 (1.324)		5.27 (1.341)		7.00 (1.100)		5.05 (1.982)		5.59 (1.858)	
	많음	7.83 (1.532)		5.69 (1.481)		7.01 (1.337)		5.44 (1.512)		5.00 (1.771)	
대화 빈도	많음	7.63 (1.460)	3.301 (.001***)	5.46 (1.556)	2.875 (.004***)	7.09 (1.301)	3.530 (.000***)	5.33 (1.873)	1.840 (.067*)	5.24 (1.893)	1.721 (.086*)
	적음	7.08 (1.477)		5.00 (1.304)		6.57 (1.247)		4.96 (1.674)		4.85 (1.980)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	적음	7.06 (1.296)	2.649 (.072*)	5.26 (1.038)	.322 (.725)	6.61 (1.113)	2.828 (.061*)	4.63 (1.771)	3.575 (.029**)	4.85 (1.426)	.827 (.438)
	보통	7.58 (1.444)		5.36 (1.524)		6.96 (1.248)		5.29 (1.717)		5.21 (1.967)	
	많음	7.66 (1.567)		5.49 (1.550)		7.20 (1.258)		5.57 (2.013)		5.32 (1.961)	

주: * p<0.1, **p<0.05,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다면적 신뢰로 정의하여 개인과 지역의 사회적 특성 그리고 참여와 네트워크로 정의되는 사회적 행위 변수가 그러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면적 신뢰와 다양한 개인 및 지역의 특성 변수, 그리고 주민 개인들의 행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는 사회자본의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서울의 중심이 되어 온 종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사회자본 현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가설이 상당 부분 실증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신뢰, 사회자본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변수들을 행정 활동이 촉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사회자본 연구에 기여했다면 이는 사회자본을 주민 개인 및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주민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개념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일부 사회자본 연구들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구조적 사회자본의 일부로 파악하거나 그 연계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참여와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요인들은 행위자의 능동적 행동을 통해서만 사회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행위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의 연구들이 주민 개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다면 본 연구는 개인을 넘어서 지역적 특성에 집중하여 신뢰로서의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회자본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은 신뢰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도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같은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라도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느냐가 이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행위로서 참여와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참여가 많을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정도가 더할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행위로서 참여와 네트워크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함을 통해서 개인과 지역이 가진 특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참여와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공동체의 신뢰를 증진시켜 공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 역

시 지역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시사한다. Shuller는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집적(Aggregation)의 문제로서 사회자본이 단순히 행위 수준으로 집합되는 개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가 개인의 태도를 묻는 응답자 설문에만 의존하지만 이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T. Shuller et als, 2000:26-30).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자본 현황에 있어서 지역 특성으로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본 논문의 새로운 측면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를 중심으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평면적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사회자본 측정 부문에 있어 다소나마 유의미한 연구모형과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엄밀한 개념화와 측정은 향후 사회자본 연구에서 취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공간적 한계와 보다 세련된 측정의 문제, 모형의 논리적 구성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 보완과 발전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 참고문헌 】

- 김상미. (2005). 지방의회의 사회자본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왕배·이경용. (2002).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6(3): 1-23.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박찬용. (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기업내 신뢰의 사회적 연결망과 개인의 조직내 성과. 『한국사회학』, 36(3): 1-23.
- 박희봉·강제상·김상묵. (2003).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관리에 대한 효과. 『한국행정연구』, 12(1): 3-25.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175-196.
- 박희봉. (2002). 사회단체와 사회자본. 『한국NGO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순미. (2000).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1): 171-203.
- 배병룡. (2005).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49-74.
-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27-49.
- 신경희·이순희. (2003).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4(1): 89-109.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행정학회보』, 9(3).
- 이곤수·송건섭. (2007). 지방 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133-152.
- 이창기·박종관. (2005). 도시지역 사회자본의 실태와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191-210.
- 이숙중. (200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9(3): 143-172.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희창·박희봉·전지용. (2007). 지방정부 조직성과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사회자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127-151.
- A. Kay. (2006). Social Capital,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2): 160-173.
- Ahn, T. K. and E. Ostrom. (2003). *Social Capital and Social Science*.

- Alejandro Portes.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Bourdieu, Pierre(1980)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in Sciences Sociales*, 31(2): 2-3.
- B. Grootaert and T. V. Bastelater. (2002).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World Bank.
- Coleman, James S. (1988).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the law. *Notre Dame J. Law, Ethics. Public Policy*, 3: 375-404.
- Coleman, James S. (1933a). The design of organizations and the right to act. *Sociological Forum*, 8: 527-546.
- Coleman, James S. (1933b). 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Feb): 1-15.
- D. Porta. (2000). Social Capital, Beliefs in Govern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S. Pharr and R.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UP 2000: 202-228.
- E. L. Glaeser et al. (2002). An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Economic Journal*, 112(Nov): 437-458.
- F. Pitchler and C. Wallace. (2007).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23-434.
- Fukuyama, Francis. (1995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 L. H. Svendsen and G. T Svendsen. (2000). On the Wealth of Nations: Bourdiereconomics and Social Capital. *Theory and Society*, 3(2): 607-631.
- M. Granovetter.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201-233.
- M. Traits. (2006) Making Democracy Work More?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2): 211-225.
- Putnam, Robert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P.
- Putnam, Robert D.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obert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fo Democracy, 6: 65-78.

S. Knack.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72-285.

T. Harpham et als.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T. Shuller et als.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 Baron et als. Eds, *Social Capital*: 1-38 Oxford UP.

기획예산처.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종로구청. (2008). 「2008 종로구 구정현황」.

종로구청. (2007). 「2007년 종로구청 통계연보」.